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 경제안보 Review

## 경제안보 분석

미국 주도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동향

## 경제안보 현안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글로벌 에너지·경제안보 리스크

## 경제안보 현안

Made in Europe 규정 (EU 산업가속화법) 발표 및 영향

## EWS 공급망 / 에너지 동향

- 美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 美 행정부 다양한 대체 수단 마련 중
- 중국 상무부, 일본 기업 20개社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글로벌 경제 전방위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 미·이스라엘-이란 분쟁 격화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제기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mailto:cesfa@mofa.go.kr)

## I. 경제안보 분석

황지현 전문관

### 미국 주도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동향

01

1. 개요
2. 양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프레임워크 및 MOU 체결
3. FORGE(지전략적자원협력포럼), Pax Silica 등 다자 협의체 활용
4. 다자 협정 체결을 통한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 구축 추진
5. 평가 및 시사점

## II. 경제안보 현안

유아름 전문관

###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글로벌 에너지·경제안보 리스크

09

1. 중동사태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2. 글로벌 에너지·물류 시장 충격
3. 주요국 경제안보 영향
4. 시사점

## III. 경제안보 현안

임산호 선임전문관

### Made in Europe 규정 (EU 산업가속화법) 발표 및 영향

19

1. 배경
2.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 IV. EWS 공급망 / 에너지 동향

- 美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 美 행정부 다양한 대체 수단 마련 중
- 중국 상무부, 일본 기업 20개社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글로벌 경제 전방위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 미·이스라엘-이란 분쟁 격화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제기

# 미국 주도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동향

황지현 전문관

## 요약

### ■ 미국은 최근 ▲핵심광물 양·다자 협력 확대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 구축 등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 중

- ▶ (양자 협력) 국무부 주도의 핵심광물 협력 프레임워크 및 MOU 체결을 확대하여 주요 우방국과의 핵심광물 협력 공고화
- ▶ (다자 협력) 기존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 MSP를 FORGE(지전략적자원협력포럼)로 재출범하고, Pax Silica 등을 통해 공급망 전주기 정책 공조 추진
- ▶ (무역지대 구축) USTR 주도로 핵심광물 다자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해 유사입장국 간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대체 공급망 구축 모색

### ■ 미국은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 10개국 및 영국,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 11개국 등과 양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프레임워크 및 MOU를 체결

- ▶ 양자 프레임워크 및 MOU를 통해 ▲핵심광물 가격 문제 해결 ▲채굴·가공 촉진 ▲공정한 시장 조성 등에 협력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 ▶ 동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협약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 선호 기조 하 2025년부터 주요 우방국과 지속 체결 중

### ■ 한편, 핵심광물 장관급회의(2026.2.4.) 계기 FORGE(지전략적자원협력포럼)을 출범하며 핵심광물 관련 다자 협력 의지 재표명

- ▶ FORGE, Pax Silica(2025.12월 출범) 등 다자 협의체를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핵심광물 및 AI 공급망 구축 추진

### ■ 최근 핵심광물 가격 하한 도입을 통한 동맹·파트너국 간 우대무역지대 구축 및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논의 확대

- ▶ USTR은 다자간 구속력 있는 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가격 하한, 관세 등 가격 메커니즘을 시행하여 핵심광물 대체 공급망 구축 추진 전망
- ▶ 다만, 무역지대 내 실질적 생산역량 확대 가능성, 최종재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

## 1. 개요

- 미국은 지난 2월 4일 핵심광물 장관급회의(Critical Minerals Ministerial, CMM)를 개최해 양·다자 협력 확대, 우대무역지대 구축 등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 표명

  - ▶ 동 회의는 美 국무부가 최초로 개최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장관급 회의로, 한국, EC, 일본, 영국, 호주 등 56개국이 참여
  - ▶ 미측에서는 루비오 국무장관(주재), 밴스 부통령(개회사), 베센트 재무장관(폐회사), 버검 내무장관, 라이트 에너지 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美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
- 트럼프 행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이며, 양자 간 협력 프레임워크·MOU 체결을 비롯, FORGE(지전략적자원협력포럼) 출범, 핵심광물 다자 협정 추진 등 양·다자 외교 채널 동시 활용

  - ▶ 전방위적 핵심광물 외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방국 간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본 고에서는 각 정책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및 현황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

## 2. 양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프레임워크 및 MOU 체결

- 미국은 국무부 주도의 양자 핵심광물 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투자, 비축,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력 공고화

  - ▶ (체결국) 호주(2025.10.20.), 태국·말레이시아(2025.10.26.), 일본(2025.10.27.), 사우디아라비아(2025.11.18.) 등 10개국에 이어 핵심광물 장관급회의(2026.2.4.) 계기 영국,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 11개국과 양자 프레임워크·MOU 체결
    - 美 국무부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의 보도자료(2026.2.4)를 통해 미국이 지난 5개월 동안 10건의 핵심광물 협력 프레임워크·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회의 계기 11건을 신규 체결하였고 17개국과는 관련 협상을 완료하였다고 발표
    - ※ 한편, 미국은 지난 2025.4월 우크라이나와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광물 등 천연자원 개발 및 수익 재투자 등에 합의
  - ▶ (주요 내용) 국가별로 상세 문안은 다소 상이하나, ▲핵심광물 가격 문제 해결 ▲채굴·가공 촉진 ▲공정한 시장 조성 ▲자금 조달 확대 등 핵심광물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 축소 및 공급처 다변화 추진
    - (가격 메커니즘 도입) 비시장 정책 및 불공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기반 시스템(standard-based system) 채택 또는 고표준 시장(high-standard marketplace) 구축, 가격하한제(price floor) 등의 수단을 마련
    - ※ 가격 메커니즘 관련 내용은 국가별로 일부 상이하며, 예컨대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는 가격하한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일본, 영국은 미포함

- (채굴·가공 관련 투자 촉진)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가속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추진 / 특히, 호주와의 프레임워크는 양국 프로젝트에 대한 10억 불 규모 투자 명시
- (자산 매각 심사) 핵심광물 자산 매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미국의 투자를 우선 고려하여 제3국의 투자 및 시장 진출을 제한

### [미국의 양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현황(합의 문서 원문 공개 사례 중심)]

국가	체결 일시	합의 문서	주요 내용	성격
우크라이나	2025.4.30.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건 투자 기금' 설립</li> <li>-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자산 개발(천연자원 수익 50%를 재건 기금에 출자)</li> <li>-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번영·발전 위한 장기적 재정 지원 및 안보 보장 지지</li> </ul>	조약
호주	2025.10.20.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투자 확대 및 자금 조달 가속화(6개월 내 미국 및 호주 프로젝트 내 최소 10억 불 규모 자금 제공 명시)</li> <li>- 정·제련 관련 규제 완화</li> <li>- 가격하한제 등 유사 조치를 포함한 가격체계 마련 및 표준 기반 시스템 채택 등</li> <li>- 광산자산 매각 시 협력 등</li> </ul>	MOU
태국	2025.10.26.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M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사, 채굴, 정·제련, 제조, 재활용 관련 투자 촉진</li> <li>- 광산자산 매각 및 외국인 투자 심사에 관한 제도적 검토권 강화</li> </ul>	MOU
말레이시아	2025.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하한제 등 유사 조치를 포함한 가격체계 마련 및 고표준 시장 구축</li> </ul>	
일본	2025.10.27.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투자 확대 및 자금 조달 가속화</li> <li>- 정·제련 관련 규제 완화</li> <li>- 고표준 시장 구축 및 가격 책정 조치(pricing measures) 마련</li> <li>- 광산 자산 매각 시 협력 등</li> </ul>	MOU
영국	2025.2.4.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M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투자 확대 및 자금 조달 가속화</li> <li>- 정·제련 관련 규제 완화</li> <li>- 고표준 시장 구축 및 가격 책정 조치(pricing measures) 마련</li> <li>- 광산 자산 매각 시 협력 등</li> </ul>	MOU

자료: The White House(2025.5.1., 2025.10.20., 2025.10.26.a., 2025.10.26.b, 2025.10.27.), GOV.UK(2026.2.5.), 김단비(2025.11.28.), 김동수(2026.1.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특징) 국무부 주도의 핵심광물 프레임워크 및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협약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 선호 기조 下 2025년부터 주요 광물 공급국 및 수요국과 지속적으로 양자 협약 체결 중
  - 최근에는 이러한 양자 협력을 바탕으로 다자 협의체를 통한 공급망 공조 강화, 구속력 있는 다자 무역 협정 체결 등 동시 전개
    - ※ 호주는 핵심광물 협력 프레임워크(2025.10.20.)를 통해 ▲표준 기반 시스템, 가격하한제 등 마련 및 ▲미래 핵심광물 가격 책정 관련 글로벌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협력 既합의 / 미국은 최근 핵심광물 가격하한제 등을 포함하는 핵심광물 무역 협정 체결 추진 중

### 3. FORGE(지전략적자원협력포럼), Pax Silica 등 다자 협의체 활용

#### ■ 미국은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계기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 「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지전략적자원협력포럼)」의 출범 발표

- ▶ FORGE는 기존 MSP(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의 후속 기구로, MSP 의장국이었던 한국이 2026.6월까지 의장국 수입 예정

\* 2022.6월 바이든 행정부 시기 출범한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 /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등 16개국 및 EU 집행위 참여 중

- ▶ FORGE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젝트 협력을 지속할 전망으로, 협력의 이점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가격 변동성, 수요 불확실성 등 시장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공급망 정책 공조 등 모색

#### ■ 한편, 미국은 2025.12월 「Pax Silica Summit(팍스 실리카 서밋)」을 개최하고 첨단 제조, AI 인프라,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생태계 구축 추진 중

- ▶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Pax Silica 참여국은 핵심광물 공동 확보, 연구 개발 협력, 인프라 구축 공조 등을 통해 AI 경제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 모색
- ▶ 美 국무부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보도자료에서 Pax Silica를 중심으로 핵심광물 채굴, 정제·가공, 최종용도, 재활용·재가공 등 공급망 전주기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주도하겠다는 의지 표명

## 4. 다자 협정 체결을 통한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 구축 추진

### ■ 밴스 부통령은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개최사에서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preferential trade zone) 구축을 제안

- ▶ 동맹·파트너국 간 핵심광물 관련 무역 블록을 형성하고, 무역 블록 내에서는 가격 하한(price floors)을 보장하여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

- 가격 하한은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기준 가격(reference prices)으로 설정되며, 조정 가능한 관세(adjustable tariffs)를 통해 유지 / 저가 광물 수입 시 관세 등을 통해 가격 하한 보장

※ 美 전쟁부는 2025.7월 MP Materials社와 가격 하한을 포함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MP Materials社의 NdPr 제품에 대해 10년간 최소 110불/kg의 가격 보장 / 이러한 가격하한제가 보다 광범위한 시장 기반 체계로 전환될 전망

### ■ 지난 1.14일 백악관은 핵심광물 232조 조사 결과 포고문 및 Factsheet를 발표하였으며, 상무부 및 USTR에 가격 하한 등 무역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협정의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

- ▶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가공된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PCMDPs\*)’의 높은 해외의존도 및 가격 변동성, 국내 생산능력 약화로 인한 국가안보 취약성 등을 지적하며 관련 협상이 미진전될 경우 관세 등 수입제한 부과 가능성을 시사

\*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 [美 핵심광물 232조 국가안보조사 결과(2026.1.14.)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치 대상	가공된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PCMDPs)
권고 사항	- 상무부 및 USTR 주도로 무역상대국과 가격 하한 등 무역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협정 협상 추진 / 협상 미진전 시 관세 등 수입제한 부과 필요 - 상무부에 지속적인 수입 모니터링 및 국가안보 영향 평가 의무화
추후 계획	180일 내 진행경과 보고 / 합의 미체결·미이행 국가에 추가 수입조정 조치 가능

자료: The White House(2026.1.14.a, 2026.1.14.b), 김수정(2026.2.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 이후 USTR은 2.26일 다자간 핵심광물 무역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ritical Minerals)에 대한 의견 수렴 개시 / 동 협정을 통해 가격 하한, 관세 등 가격 메커니즘 시행 및 유사입장국 간 대체 시장 구축 전망

- ▶ USTR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역 협정을 통해 회복력 있고 왜곡되지 않은 대체 시장을 구축하여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실질적 재편을 추진 중

- 동 무역 협정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일은 3.19일로, 이후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5. 평가 및 시사점

### ■ **美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주요 정책 어젠다로 인식하고 글로벌 주요국들과 양·다자 핵심광물 협력 지속 추진**

- ▶ 2025년에는 양자 협력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문제 대응 / 양자 프레임워크·MOU는 특정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 등 구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다자 협력으로의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
- ▶ 하지만 저가 광물 공세, 수요 불확실성 등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 공조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자국중심주의 관점에서 추진하던 국내 정책을 국제화·다자화하려는 움직임 관찰

※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美 시장의 수요는 제한적이므로(미국은 글로벌 코발트 소비량의 3.6%, 니켈 소비량의 5.1%, 희토류 소비량의 1.7% 차지), 동맹·파트너국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영향력 확보 및 공동 대응 필요(Baskaran & Schwartz, 2026.2.13.)

### ■ **미국이 최근 추진 중인 핵심광물 우대무역지대 구상은 가격 하한 및 관세 등을 통해 역외 저가 광물의 유입을 막으려는 것으로 관찰 / 다만, 실질적 생산역량 확대 가능성, 최종재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

- ▶ 역외 저가 광물에 대한 관세 부과는 역내산 핵심광물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실제 핵심광물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 및 생산 확대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공급망 재구축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
- ▶ 핵심광물 가격 하한 설정 시 무역지대 내 거래 가격이 기존 대비 상승할 것이므로 역내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최종재 가격 또한 인상 가능 /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수요측이 떠안는 구조에 대한 우려 제기

### ■ **미국은 상기 양·다자 협력 외에도 비축, 기업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모색 중 / 다양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전망**

- ▶ 美 수출입은행(EXIM) 주도로 120억불 규모 광물 비축 사업 ‘Project Vault’를 가동하고, MP Materials, Lithium Americas, USA Rare Earth 등 주요 핵심광물 기업 지분 인수를 통해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정책 전개 중
- ▶ 미국이 추진 중인 범부처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이니셔티브를 통합된 정책 조율 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한다면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노력의 효과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참고문헌

- 김단비. (2025.11.28.).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협정 체결 동향 및 시사점. 경제안보 Review 25-22. 경제안보외교센터.
- 김동수. (2026.1.28.). 미국과 유럽의 핵심광물정책 및 우리의 대응방안. i-KIET 산업경제이슈 제 202호. 산업연구원.
- 김수정. (2026.2.4.). 팍스 실리카(Pax Silica) 출범과 핵심광물 공급망 혁신방안 : 글로벌 자원 패권 경쟁 속 K-자원 공급망 구축 입법·정책 과제. 이슈와 논점 제2471호. 국회입법조사처.
- Baskaran, G. & Schwartz, M. (2026.2.13.). Critical Minerals Ministerial Introduces New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y. CSIS.
- Federal Register. (2026.2.26.). Request for Comments on the Design of a Plur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Critical Minerals and Policy Action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 GOV.UK. (2026.2.5.). UK and US sig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ritical minerals.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26.2.26.). USTR Seeks Public Comment on the Design of a Plur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Critical Minerals and Policy Action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 The White House. (2025.5.1.).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Agreement to Establish United States-Ukraine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 The White House. (2025.10.20.). United States-Australia Framework For Securing of Supply in the Mining and Processing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
- The White House. (2025.10.26.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Concerning Cooperation to Diversify Global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and Promote Investment.
- The White House. (2025.10.26.b).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Concerning Cooperation to Diversify Global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and Promote Investment.
- The White House. (2025.10.27.). United States-Japan Framework For Securing the Supply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 through Mining and Processing.
- The White House. (2026.1.14.a). Adjusting Imports of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
- The White House. (2026.1.14.b).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irects Negotiations to Adjust Imports of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
- U.S. Department of State. (2026.2.4.). 2026 Critical Minerals Ministerial.
- U.S. Department of State (2026.2.4.). Vice President JD Vance,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Japanese Stat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Horii Iwao,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Senior Director of Global Supply Chains David Copley, and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Economic Affairs Jacob Helberg at the Opening Remarks of the Critical Minerals Ministerial.

## 저자 소개

황지현 | [jhhwang24@mofa.go.kr](mailto:jhhwang24@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배터리, 산업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와 글로벌 협력 구도 재편(경제안보 Review 26-3호, 2026)”,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동향(경제안보 Review 25-9호, 2025)”,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산업 정책과제 연구(KDI, 2022)”가 있다.

#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글로벌 에너지·경제안보 리스크

유아름 전문관

## 1. 중동사태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2.28.),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 및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군사 공격을 선언하며 실질적 봉쇄 조치를 단행(3.1.)

- ▶ 이란은 2025.6월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과 달리, 이스라엘 포함, 사우디 아라비아, UAE, 카타르, 바레인 등 인근 걸프국가 내 미군 기지와 美 대사관, 주요 에너지 시설 및 핵심 인프라(공항, 항만 등)를 공격하며 대응
- ▶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포함 최소 14척의 선박을 공격, 물리적 봉쇄는 아니나 통과 선박에 대한 공격 위협 및 실질적 공격을 통해 사실상 해협 봉쇄 효과 발생, 통과 선박 수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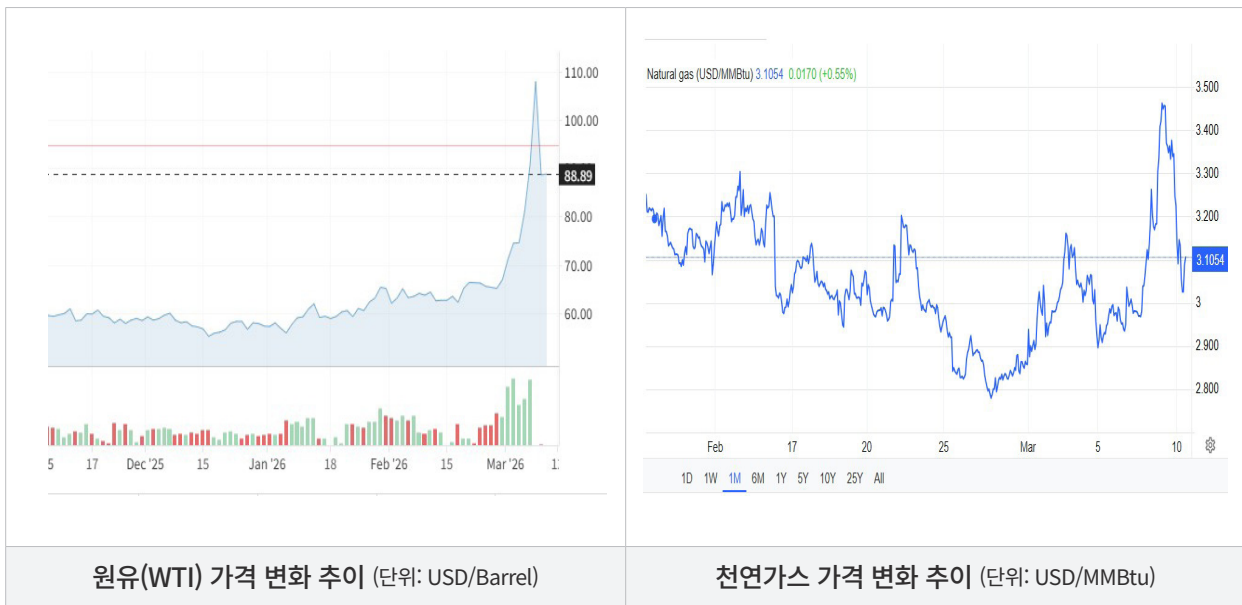
### <중동사태 따른 에너지·공급망 관련 경과>

- (2026.2.28.) ▲미국-이스라엘 이란 본토 공격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 (2026.3.1.) ▲이란 혁명수비대(IRGC),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군사 공격 선언
- (2026.3.2.) ▲이란 드론, 주사우디 美 대사관 및 정유시설(Ras Tanura) 및 카타르 라스라판(Ras Laffan) 가스 액화시설 공격 → 사우디 정유시설 임시 가동 중단, 카타르 정부는 LNG 수출 중단 발표
- (2026.3.3.) ▲이란 드론, UAE 주재 美 영사관, 푸자이라항 공격 ▲글로벌 최대 해운사 머스크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운송 중단 발표 ▲이라크, 호르무즈 봉쇄로 산유량 감축
- (2026.3.4.) ▲美 상원,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력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쟁 권한 결의안」 부결 ▲트럼프 대통령, 필요시 美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호송하겠다 언급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몰타 국적 컨테이너선 ‘사핀 프레스티지호’에 미사일 공격
- (2026.3.5.) ▲美 잠수함,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 격침 ▲이란 IRGC, 걸프 해역에 정박 중인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발표 → 뉴욕증시 하락
- (2026.3.7.) ▲사우디 외무장관, 이란에 자국 에너지 시설 공격 지속 시 보복조치 통보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 걸프 이웃 국가에 대한 공격을 사과했으나 강경파 IRGC의 대중동 공격 지속 ▲이스라엘, 이란 석유 저장시설 공습
- (2026.3.8.) ▲이란 드론, 바레인 담수화 시설 공격 ▲쿠웨이트 석유공사, 아부다비 석유공사 원유 생산 및 정유 처리량 감축 발표 ▲라이트 美 에너지부 장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로 몇 주 안에 유가 내려갈 것이라 언급(ABC, CNN 인터뷰)
- (2026.3.9.) ▲트럼프 대통령, ‘전쟁 마무리 수순’이라고 언급(CBS 인터뷰), 이후 유가 하락

## ■ 호르무즈 해협 및 중동 전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급등, 군사 충돌 전 배럴당 약 \$70였던(2.27.) 유가는 \$100 이상까지(3.8.) 상승

- ▶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이 막힌 중동 산유국들은 생산량 감축을 결정, 카타르 LNG 수출 무기한 중단(3.2.), 쿠웨이트와 UAE 아부다비 석유공사 원유 생산감축 발표(3.8.), 이라크는 원유 생산량 절반을 감축
- ▶ 서부텍사스원유(WTI)는 배럴당 \$67(2.27.)에서 \$109.05를 기록(3.8.), 브렌트유도 배럴당 \$109을 기록하며 급상승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CBS와 인터뷰에서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끝날 수 있다'고 언급하자(3.9.) WTI는 배럴당 \$85까지 하락
- ▶ 천연가스 선물가격 또한 상승, 카타르가 LNG 수출 시설 가동을 중단하며 네덜란드 TTF는 약 50%, 동북아 JKM은 약 40% 이상 상승, 반면 미국산 헨리허브(HH) 가격 상승폭은 11% 수준에 그침

[그림 1]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변화 추이 (2026.2월~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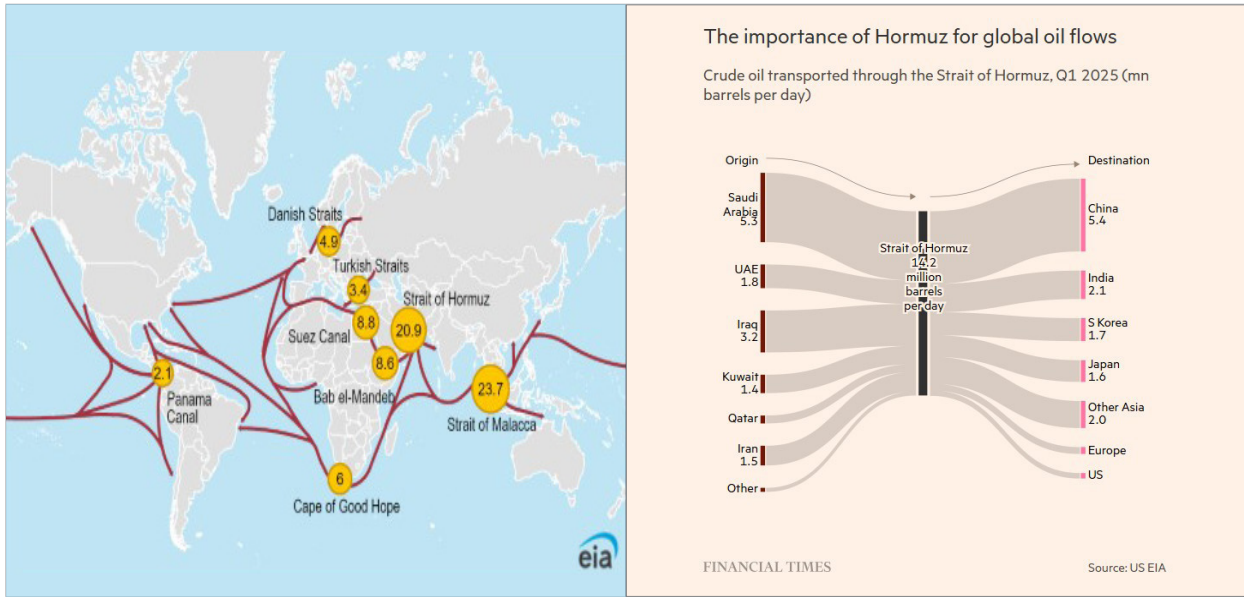


자료: 한국석유공사, Trading Economics

## ■ 호르무즈는 일 평균 2,000만 배럴(전 세계 원유 소비 약 20%)이 통과하는 물류 병목이며, 전 세계 LNG 교역의 약 20%가 통과 → 봉쇄가 아니어도 통과 선박에 대한 공격 위협만으로 보험·운임·해지 비용 상승(EIA, 2025.6.16.)

- ▶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전쟁 위험 보험료는 기존 선박 가액의 약 0.25%에서 3%로 약 12배 급등(FT, 2026.3.3.)

## [그림 2] 원유 운송 병목점 지도 /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유 국가별 수출입 현황



자료: EIA(2024), FT(2026.3.3)

### ■ 이란은 분쟁 발생 시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여러 차례 시사했으나\* 완전 봉쇄는 미이행, 그러나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실질적 해협 봉쇄를 단행

\* ▲ (1979-1989년) 이슬람 혁명 초기 및 이란-이라크 전쟁 ▲ (2011-2012년) 핵협상·제재 국면 ▲ (2018~2019년) 美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복원 ▲ (2025.6월) 이란-이스라엘 무력충돌

#### ▶ 물리적 차단에는 한계가 있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 등을 통해 봉쇄

- 이란은 이라크 영해에 정박중인 유조선 2척(3.11)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스라엘, 태국, 일본 선적 등 외국 선박 최소 14척을 공격, 그러나 중국 국적의 일부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FT, 2026.3.7.)\*

\* 2.28.일부터 3.6일까지 최소 10척의 선박이 자동 식별 장치에 입력하는 목적지 신호를 ‘중국인 선주’, ‘전원 중국인 선원’, ‘무슬림 선박’ 등으로 변경해 호르무즈를 통과

#### ▶ 美 잠수함이 인도양 공해상에서 이란 호위함을 격침하면서(3.5.) 군사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인도양까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 발생

- 사태 장기화 및 확산 시, 주요 에너지 수송로(오만만에서 선적된 에너지는 스리랑카 공해상에서 말라카 해협으로 이동)인 인도양 해상 항로의 안전 문제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존재

## 2. 글로벌 에너지·물류 시장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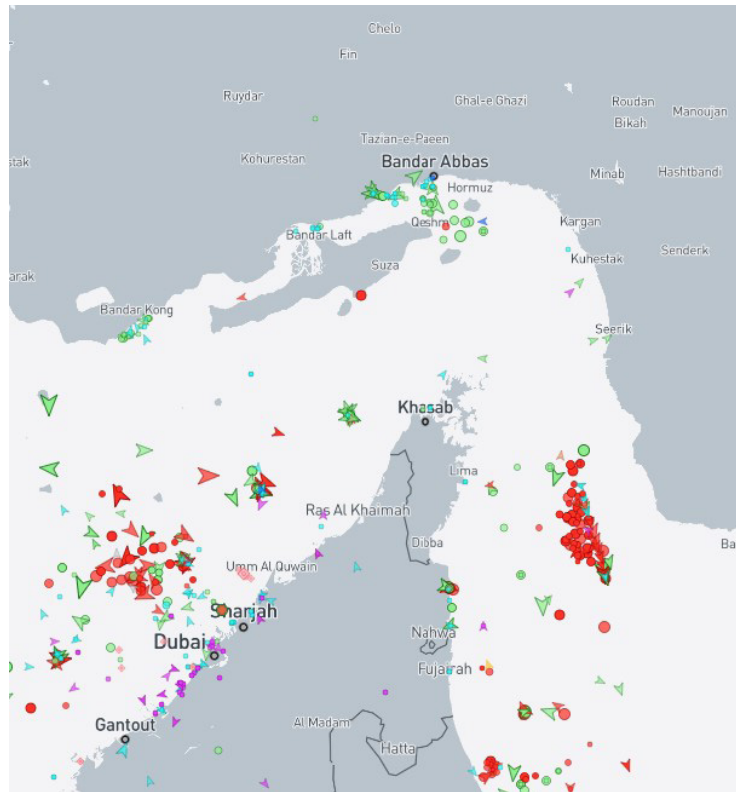
### ■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 압력 확대) 해상 운송 차질과 에너지시설 공격으로 인한 생산 감축 및 수출 중단, 저장 유조선 부족 문제 등으로 공급 차질

- ▶ **(원유)** 이란 원유 생산량은 하루 345만 배럴로 전 세계 공급량의 3%에 미치지 못하나(EIA), 호르무즈 봉쇄와 역내 군사 충돌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송이 중단되며 유가·천연가스 가격이 급상승 →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
- ▶ **(천연가스)** 사태 장기화 시 원유보다 더 큰 문제는 천연가스 수급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유 비축량에 비해 LNG 비축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금번 중단된 카타르의 액화 설비 가동이 재개돼도 이전 생산량 회복에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전유진, 2026)
  - 카타르가 중단한 LNG 물량은 550만 톤으로 글로벌 수요의 약 1.5%이지만, 향후 카타르 천연가스 시설에 대한 이란의 추가 공격 시 카타르산 LNG 의존도 높은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 발생할 전망
- ▶ **(석유 화학제품)** 중동 석유화학 제품 수출 차질, 글로벌 에틸렌 생산설비에서 사우디 7.8%, 이란 3.5%, 글로벌 헬륨 생산에서 카타르 약 19.1%를 차지하며,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위치 → 충돌 장기화 시 석유화학 제품 원료인 나프타(Naphtha) 조달 차질로 석유화학제품(에탄올, 메탄올, 요소수 등) 가격 상승 우려(전유진, 2026)
  -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하는 헬륨의 경우 우리 총 수입의 64.7%를 카타르에 의존 (한국무역협회 통계, 2025년기준)

## ■ (해상 물류 및 보험 시장 충격) 호르무즈 해협 위험 증가로 ▲해상 보험료 급등 ▲선박 운항 중단 및 선박 대기 증가 등으로 글로벌 해운 공급망 교란 발생

- ▶ 상하이컨테이너운임 지수(SCFI) 1333.11(2.27.)에서 1489.19(3.6.)로 상승, 2025.6월 이스라엘의 對이란 공격 시 SCFI 지수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과 달리 2026년 미국의 이란 공격은 글로벌 해운 불안을 반영해 지수 급상승
  - 호르무즈 해협 일평균 항행 척수는 약 150척이나 현재 90% 이상 급감, 약 200척 이상이 걸프만 및 오만만에 계류 중(Al-jazeera, 2026.3.5.)
  - 유조선의 스폿 운임을 나타내는 유조선지수(World Scale, WS)는 224.7포인트(2.27.)에서 465.56포인트(3.3.)로 급등, 중동과 극동 노선을 오가는 초대형유조선(VLCC)의 하루 용선료도 \$218,154에서 \$423,736로 두 배 이상 상승
  - 사태 장기화 시 보험료 및 해상 운임 급등으로 중동산 에너지 수입과 상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
- ▶ 호르무즈 해협 외 인근 홍해, 인도양 등의 리스크 발생 확산 우려도 제기
  -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로인 홍해 밥엘만데브 해협에 대한 이란 프록시(proxy)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또는 수에즈 운하 통과 선박에 대한 무장세력의 공격 시 유럽-아시아 간 물류 이동 차질 발생 예상되나, 하마스, 헤즈볼라 및 후티반군 모두 2025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력화 되어 실질적 공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그러나 美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군함을 격침(3.5.), 향후 인도양 해운 리스크 확산 우려

### [그림 3]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해운 현황(2026.3.5.기준)



자료: Marinetraffic.com (2026.3.5.검색)

- \* ▲ (빨강) 유조선(tanker) ▲ (초록) 화물선(cargo vessels) ▲ (하늘) 예인선 및 특수선(tugs & special craft) /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두 개의 화물선은 이란 국적 선박

#### ■ (거시경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및 美 달러 강세 우려

- ▶ 유가 배럴당 \$100이상 지속 시 물가 상승, 무역수지 악화 및 성장률 하방 압력 확대
  - ※ 국제 유가 10% 상승 → 세계 물가 0.4% 상승(IMF), 소비자물가 0.2% 상승 전망(한국은행)
  - 유가 상승은 달러 강세를 유도, 유가 10% 상승 시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0.5~1% 상승
  -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사태 장기화 시 유가·시장 심리·인플레이션 등에 영향을 미쳐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 언급하며, 아시아 원유 수입국, 태평양 도서국, 저소득국에서 중동 사태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 높다고 부연 (Bloomberg, 2026.3.5.)

### 3. 주요국 경제안보 영향

-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약 82%는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 수출, 국가별 비축분으로 단기 내 실질적 공급 차질은 제한될 것이나 사태 장기화 시 유가 상방 압력 지속, 아시아 및 EU 국가 에너지 수급 위험이 확대될 전망

- ▶ **(중국)** 총 원유 수입 중 중동산 비중 약 39.5%로, 이중 제재를 우회해 들어오는 이란산 원유 포함시 최소 40~45%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유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FT, 2026.1.8. 중국세관통계)
  - 원유 재고 약 4~5개월 치 확보 중이며, 사태 장기화 대비 원유 조달 차질을 우려해 중국 정부는 국영 정유사에서 정제품(휘발유, 경유) 수출 중단을 지시(3.5.)
  - 중국의 원유 비축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이 막힌 중국 민간 정유사에게 이란 원유 공급 중단은 이중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
- ▶ **(인도)** 인도는 2025년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에 합의, 이후 중동산 에너지로 대체해 인도 LNG 수요 약 65%, LPG 95%를 중동에서 수입, 비축량 최대 2주로 에너지 부족을 우려한 인도 정부는 러시아산 LNG 구매 고려 중
- ▶ **(일본)** 일본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90% 이상이나\*, LNG 대중동 수입 의존도는 10% 미만. 비축량은 정부 및 민간 재고 등을 포함해 원유는 254일, LNG는 90일분 보유 중
  - \* ①사우디(40.4%) ②UAE(39%) ③쿠웨이트 8.3% (METI(日), 2023년)
- ▶ **(EU)**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이미 러시아산 PNG 의존량을 미국과 카타르산 LNG로 다변화, EU의 카타르산 LNG 의존도는 10% 미만으로 아시아 국가에 비해 타격은 적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EU의 천연가스 재고가 2월 말 기준 29.98%로 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우 낮아 중동 사태 장기화 시 아시아 국가와 천연가스 확보 경쟁 가능성도 존재

## ■ 반면, 중동산 원유 및 LNG 대체 공급국으로 미국산 에너지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 또한 대체 수입국으로 레버리지를 얻을 것으로 전망

- ▶ 미국은 에너지 자급율 약 83%로 해외 에너지 의존도 낮으나,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시 ▲자국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금리 정책 영향 등 발생 가능
  - 중단기적으로 중동산 에너지 수급이 막힌 아시아 및 유럽국가의 미국산 원유 및 LNG 수요가 높아지고, 정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미국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착 시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어져 저유가 정책을 표방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 러·우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에너지 수출에 차질을 빚었던 러시아는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지정학적 레버리지 확대 가능
  - 알렉산드로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에너지 기업들과 면담에서 유럽행 LNG를 인도와 중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3.6.), 인도 정부 또한 러시아산 LNG 구매를 고려 중
  - 라이트 美 에너지부 장관은 CNN, ABC와 인터뷰(3.8.)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폭등 안정화를 위해 인도 측에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제안, 베센트 美 재무부 장관은 유가 안정화를 위해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해 30일 동안 구매 승인을 발표(3.12.) 했으나, 이는 단기 조치일 뿐 대러 제재 완화 의도는 아니라고 부연

■ **금번 중동사태는 에너지 안보와 국가 안보의 밀접성을 상기시키는 사례로(Daniel Yergin, 2026), 미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국으로 부상한 반면 아시아 국가와 EU는 여전히 에너지 대외수입 의존도 높아, 향후 에너지 안보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 향후 유럽 및 아시아 국가 간 대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LNG의 경우, 카타르산 LNG 수입 대체국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가 거론되고 있으나 미국과 호주의 수출 시설 대부분의 물량이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고, 캐나다는 현재 가동 중인 LNG Canada 여유 물량이 제한적이라 증산보다 기존 현물 물량의 재배치에 따른 아시아와 유럽 국가 간 LNG 확보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카타르는 세계 LNG 수출비중의 약 20%를 차지하며, 카타르 LNG 수출 중 84%가 아시아 국가로 수출

## 4. 시사점

■ **미국은 이란 공습 이후 유가 급등에 직면하며, 글로벌 공급 확대 및 호르무즈 안정화를 통한 저유가 유지 전략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 관찰**

- ▶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전략 1순위는 저유가 유지(배럴당 \$40 이하 목표)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확보 및 미국 내 원유·가스 생산 확대 등을 통해 공급·확대 정책 추진(유아름, 2026)
- ▶ 그러나, 이란 공습 이후 일주일 만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 급등하며 美 행정부의 저유가 정책에 부담 확대
- ▶ 라이트 美 에너지부 장관은 인도에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제안하고(3.8.),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사태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언급(3.9.)하는 등 유가 안정조치에 집중

■ **금번 중동사태는 우리 경제의 에너지 의존 구조에 기반한 경제안보 리스크를 현실화한 사례로, 비축·수입선다변화·우회항로 개발 등 구조적 대응 필요성 제기**

- ▶ (수입 현황) 원유 수입의 63.1%\*, LNG 수입의 36%\*\*를 중동에 의존하며,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 ①사우디(32.2%) ②미국(16.4%) ③UAE(13.7%) ④이라크(9.4%) ⑤쿠웨이트(7.8%)

\*\* ①호주(26%) ②카타르(24%) ③오만(12%) ④말레이시아(12%) ⑤미국(11%) (관세청, 2024년)

- 사우디(동서 송유관 → 홍해 양부(Yanbu) 항)·UAE(Abu Dhabi 송유관 → 오만만(Fujairah)산 원유와 달리 이라크·쿠웨이트산 원유 및 카타르산 LNG는 우회항로 없어 수급 차질 전망
- ▶ (영향) 사태 장기화 경우 ▲유가 상승 ▲대체물량 확보 경쟁 심화 ▲홍해 병목 리스크 ▲공급망 교란 등 발생 가능성 우려
  - (대체물량 확보 경쟁 심화) ▲중국, 인도, 일본, EU 등 중동산 에너지 의존국의 대체물량 확보 경쟁 심화 ▲물류 비용 증가 상승으로 호주-미국 대체 물량 확보 시 추가 운임 상승 우려

- (홍해 병목 리스크) 밥엘만데브 해협, 수에즈 운하(홍해) 등으로 확전 시 ▲미국산 LNG 및 원유 수입 운송 차질 ▲글로벌 운임·보험료 상승 등 추가 비용 부담 확대
- (공급망 교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 사례는 대체로 상선에 집중,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재(알루미늄 등) 공급망 교란 우려 증가
- (카타르 생산 차질 파급 확대) LNG는 원유 보다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생산 중단 이후 재개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카타르의 LNG 정상화 지연에 따른 글로벌 LNG 거래망 리스크 확대
- ▶ (정책적 함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해상 병목점(chokepoint) 관리와 에너지·물류·금융을 포함한 통합 경제안보 대응 체계 구축 ▲우회항로 개발 ▲중동 정세 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외교 및 전략적 협력 강화 필요
- 호르무즈 해협 발 해운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항로로 북극항로와 향후 건설 예정인 이라크-튀르키예 개발로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항로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병존해 실질적 한계 노정(강문수, *이지은*, 2025)

**[표 1] 대안항로 비교 분석(2026.3.9.일 기준)**

항목	기존 항로	북극항로	개발 로드	IMEC
주요경로	동북아 → 호르무즈 / 밥엘 만데브(홍해) → 수에즈운하 → 지중해	동북아 → 러시아 북극해 → 북해	이라크 → 튀르키예 → 유럽	인도 → UAE/사우디/요르단/이스라엘 → 유럽
운송거리 (상하이-로테르담)	20,000km	12,840km (30~40% 단축)	14,000~16,000km	12,000~14,500km
운송기간	30~35일	20~23일 (해빙기 기준)	변수 많아 추정 곤란 (환적 많음)	불확실, 철도+항만 환적 줄일 경우 수일 단축
운임비용	기준(100%)	30~40% 절감 예상	환적·내륙비·보안비용 등으로 절감폭 제한적	인프라 완공시 절감 가능
장점	인프라 완비, 대규모 물동량 처리 가능	해상 병목 회피, 거리 절감 가능	해상 병목 회피	美·EU·인도 협력 기반 전략적 연계성
단점	지정학 병목, 이란-예멘 위협 상존	북극기후 변수, 인프라 낙후	정치불안, 건설 지연, 환적 리스크	美 정권교체로 프로젝트 지속성 불투명
지정학 리스크	이란·후티 반군 공격, 테러 공격, 해적 등	북극기후, 러시아 경로 강제 등	이라크 내전, 테러공격(IS), 튀르키예-쿠르드 갈등	중동정세, 美 정책 변화
인프라 성숙도	높음	낮음	초기단계, 승인/건설 중	초기단계(MOU 수준)

자료: 유아름(2025)

- 실질적·상업적 운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안항로 구축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에너지원 공급선 다변화, 호르무즈 해협 우회 인프라 보유 국가(사우디, UAE)와 상시 공급 협력 강화 등 전략 병행이 필요

## 참고문헌

- 강문수, 이지은(2025.5.20.). “홍해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과 물류 회랑 다변화예의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
- 김태균(2026.1.12.). “흔들리는 OPEC...트럼프, ‘세계 석유 지도’ 다시 그리나”. *연합뉴스*.
- 박동해(2026.3.5.). “이란 호르무즈 봉쇄에 해상 운임 급등...한국 경제 직격탄 우려”. *부산일보*.
- 박진형, 한중구, 박상현(2026.3.2.). “원유 생명선 끊겼다...호르무즈 봉쇄에 비상 걸린 아시아 경제”. *연합뉴스*.
- 양현주(2026.3.3.). “카타르 LNG 시설 가동 중단...천연가스값 비상”. *연합뉴스*.
- 유근형(2026.3.12.). “이란, 호르무즈 800km 밖 이라크 영해 유조선 2척 공격”. *동아일보*.
- 유아름(2025.7.11.). “중동 핵심 해협(호르무즈, باب엘만데브, 수에즈 운하) 경제안보 리스크와 대응방향”. *경제안보리뷰 25-13호*.
- \_\_\_\_\_(2026.1.23.).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개입과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화”, *경제안보리뷰 26-3호*.
- 윤대원(2026.3.9.). “미-이란 전쟁, 중동의 물길 막혔다...리스크 커지는 LNG 수급”. *전기신문*.
- 전유진(2026.3.9.). “이란 사태 팔로워, 그리고 향후 고민해야 할 것들”. *iM증권*.
- 정의길(2026.3.4.). “미국, 이스라엘 때문에 이란 공격...루비오 발언 파문”. *한겨레*.
- 정지용(2026.3.9.). “인도 러시아산 석유 구매, 미국이 먼저 제안...유가 안정 위해”. *한국일보*.
- 삼일PwC경영연구원(2026.3월). “미국-이란 군사 충돌에 따른 한국 경제 및 산업 영향 점검
- 현대경제연구원(2026.3.3.). “”오일 쇼크 발 스크루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26-1*.
- Fleming, Sam, and Claire Jones(2026.3.1.). “What will war in Iran do to the global economy?”. *Financial Times*.
- Hakyung, Kim. (2026.3.5.). “War, oil, growth and inflation”. *Financial Times*.
- Hirschfeld, Andy and Reuters. (2026.3.2.). “Why Qatar Energy’s LNG production halt could shake up global gas markets”. *Al-Jazeera*.
- Jiao, Claire., and Patpicha Tanakasempipat (2026.3.5.). “IMF says Mideast War to test world economy, expecting new shocks”. *Bloomberg*.
- Latif, Abdi., and Peter Eavis(2026.3.11.). “Iran attacks at least one ship in the strait of Hormuz, a key oil passage”. *The New York Times*.
- Leahy, Joe., Malcolm Moore(2026.1.8.). “Donald Trump’s Venezuela action raises threat for China’s oil supplies”. *Financial Times*.
- Majkut, Joseph., and Kevin Book, Adi Imsirovic, Sarah Emerson, Raad Alkadiri, Leslie Palti-Guzman, and Ben Cahill. (2026.3.6.). “What does the Iran War mean for global energy markets?”. *CSIS*.
- Nakhoul, Samia., and Parisa Hafexi(2026.3.8.). “Saudi has told Iran not to attack it, warns of possible retaliation, sources say”. *Reuters*.
- Shakil, Ismail. (2026.3.13.) “US issues 30-day sanctions waiver for purchase of Russian oil at sea”. *Reuters*.

- Stylianou, Nassos., and Malcolm Moore (2026.3.7.). “Ships in Guld declare themselves chinese to dodge attack”. *Financial Times*.
- Varghese, Justin. (2026.3.6.) “How long will Strait of Hormuz tanker crisis keep oil price rising?”. *Gulf News*.
- Xiao, Eva., and Oliver Roeder. (2026.3.7.). “A week of war in charts: the impact on the US”. *Financial Times*.
- Yergin, Daniel. (2026.3.7.). “Is the nightmare scenario for global energy here?”. *Financial Times*.
- EIA (2025.6.16.). “Amid regional conflict, the Strait of Hormuz remains critical oil choke point”. *EIA*.
- EIA 에너지통계 (<https://eia.gov/>).
- MarineTraffic (<https://marinetraffic.com/>).
- Trading Economics (<https://tradingeconomics.com>).
- SFCI (<https://en.sse.net.cn/>).
- 한국석유공사 유가통계(<https://petronet.co.kr>).
- 관세청 수출입통계(<https://tradedata.go.kr>).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stat.kita.net>).

## 저자 소개

유아름 | aryoo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기술패권 경쟁, 디지털·AI 규범, 디지털 통상, 빅데이터 분석, 에너지, 중동 정치경제이다. 주요 연구로는 『클라우드 산업과 경제안보: 데이터안보와 기술통제』 경제안보리뷰 24-16호(2024), 『글로벌 LNG 동량과 미국의 LNG 정책』 경제안보리뷰 25-7호(2025), 『피지컬 AI 공급망 분석과 경제안보적 함의』 경제안보리뷰 25-23호(2025) 등이 있다.

# Made in Europe 규정 (EU 산업가속화법) 발표 및 영향

임산호 선임전문관

## 1. 배경

### ■ EU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산업가속화법 (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이 공식 발표(3.4.)

- ▶ EU의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이 공식 발표되었으며, 동 법안은 당초 2025년 4분기 제안이 예고된 이후 회원국 간 이견 등으로 발표가 여러 차례 연기되어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2026년 2월 말로 일정이 조정된 뒤 2026년 3월 4일 최종 초안이 공개
  - EU의 산업가속화법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럽산 우대’ 방향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중심의 역내 산업 우대, 무역파트너국과의 산업 이해관계 충돌,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
  - 한편,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역내 산업 간 이해관계 충돌 등을 이유로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짐
  - 집행위원회 내부 조율을 위한 집행위원단 회의(College of Commissioners)에서 EU 원산지요건 적용 범위와 외국인 투자 조건 등 주요 쟁점 조항이 일부 완화·수정되면서 법안 초안이 공식 발표
- ▶ EU 산업가속화법에서 다루는 산업과 정책 조치가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산업과 그 활동 범위를 포괄함에 따라, 산업가속화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필요
  - 특히 동 법안은 공공조달 및 보조금 지급 조건 설정, 외국인투자 규제,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EU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어,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생산·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아울러 법안 초안에는 해당 조치가 EU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EU가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안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제도화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

## 2. 주요 내용

### ■ (구성 및 목적) 해당 법안은 6개 장(Chapter)과 5개 부속서(Annex)로 구성

- ▶ (구성) 법안은 전략산업의 공급망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제3장과 제4장, 그리고 부속서 II와 III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EU 원산지요건, 저탄소 기준, 외국인 투자 규제 조건 등을 규정
  - 특히 해당 규정은 철강·배터리·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안의 구체 내용에 따라 한국 기업의 진출, 투자 및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우려되어 왔음

#### <법안의 구성>

- 동 법안은 6개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일반 규정: 법의 목적 및 적용 범위 등)과 제6장(최종 규정: 법의 운영 및 집행 절차 등)을 제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장(허가 및 행정절차) : 산업 프로젝트 허가 간소화 및 신속화 관련 규정
  - 3장(EU 전략산업 가치사슬 강화) :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시 EU 원산지·저탄소 기준 규정
  - 4장(외국인투자규제 강화) : 전략산업 대상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조건 및 심사 절차 규정
  - 5장(산업제조 가속 영역) : 산업단지 및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제조 가속화 지역 지정 및 지원 관련 규정
- 부속서(Annex)는 총 5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속서 I(전략 산업 목록) : 동 법에서 지정한 전략 제조 산업 분야규정
  - 부속서 II(EU 원산지 및 저탄소 기준) :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시 적용되는 EU 원산지 및 저탄소 요건규정
  - 부속서 III(차량 EU 원산지 규정) : 전기차 등 차량에 대해 EU 내 조립 및 부품 로컬 콘텐츠 기준규정
  - 부속서 IV(Regulation (EU) 2018/1724 개정) : 단일 디지털 게이트웨이 등 행정 절차 디지털화 관련 규정 개정
  - 부속서 V(Net-Zero Industry Act((EU) 2024/1735) 등 개정) : 공공조달 및 지원 정책에서 EU 원산지 요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존 법안 개정

- ▶ (목적) 동 법은 ▲EU 전략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공급망 회복력 및 경제안보 확보 ▲산업 탈탄소화 및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
  - 전략산업 부문에서 일부 교역 파트너가 EU의 공급망 의존성을 경제적·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EU의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위험 요인으로 인식

- 이에 EU는 산업기반과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후 전환을 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

▶ **(목표)** 산업가속화법에서는 현재 EU GDP의 14.3% 수준인 제조업 비중을 2035년까지 20%로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가속화 ▲단일시장 접근 보장 ▲제조업 일자리 창출 ▲산업 탈탄소화 및 기후 성과 개선 ▲EU 시민·기업의 필수 원자재 및 제품 접근성 확보 등의 정책 수단을 추진

### ■ (전략산업 가치사슬 강화) 전략산업 제품에 대해 EU 원산지 및 저탄소 요건을 도입하고, 이를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제도 등 정책수단을 통해 적용 (제3장, 부속서 I·II·III 참조)

▶ 산업가속화법은 전략산업 부문의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제도에 EU 원산지 및 저탄소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

- 이를 통해 공공 구매력과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EU산 및 저탄소 산업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 법안은 공공조달이 EU GDP의 약 14%(약 2조 유로)에 달하는 규모이며 역내 시장이 4억 5천만 명의 단일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서문 中), 이러한 시장 규모와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 EU 원산지 및 저탄소 기준을 확산시키려는 산업정책적 의도를 드러냄

▶ 법안에서는 전략산업으로 ▲에너지집약산업 ▲넷제로기술산업 ▲자동차 산업을 지정하며, 해당 산업이 EU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에 중요하며 EU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고 설명

- 전략산업은 건설,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 및 방위 산업 등 하류산업의 공급자 역할을 함으로써 다양한 산업 가치사슬의 기반을 형성하고 기후 전환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

- 넷제로 기술 산업뿐 아니라 철강·시멘트·화학 등 에너지집약 산업까지 전략산업 범주에 포함시켜, 기후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 기반을 유지·재강화하려는 의도로 산업정책, 경제안보 정책, 기후정책의 결합으로 작용

#### <전략산업의 분류> (부속서 I 참조)

- 에너지집약산업은 건물, 인프라 및 자동차 등에 활용되는 철강, 시멘트·콘크리트, 알루미늄 등의 산업을 포함하며, NACE 코드 기준 C17(종이 및 펄프 제조), C19(정유, 코크스 제조), C20(화학), C22(고무, 플라스틱), C23(시멘트, 유리, 세라믹), C24(철강, 금속) 산업 포함
- 넷제로 기술 산업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수소 ▲바이오 가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전력망 ▲원자력 에너지 ▲수력발전 ▲에너지효율 기술 등을 포함하며, 규정(EU) 2024/1735 제4조 제1항에서 정의된 산업을 의미
-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을 포함하며, NACE 코드 C29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분류됨

- ▶ **EU 원산지 요건과 관련해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관세동맹 체결국 ▲정부조달협정(GPA) 당사국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EU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EU산과 동등하게 인정 가능**
  - 다만, 집행위원회는 해당 제3국이 관련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이 EU의 공급망 안정성 또는 경제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임입법을 통해 이러한 동등 인정 범위를 제한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
  - 특히 이러한 조항은 산업가속화법 초안이 최종 발표되기 직전에 추가·수정된 사항으로, EU 외 공급업체의 공공조달 참여 범위를 둘러싸고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가능성 존재
- ▶ **전략산업 제품의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제도에서는 저탄소 제품과 EU 역내 생산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2029.1.1. 이후 개시되는 조달 및 지원 절차부터 적용 예정**

#### <에너지집약 산업제품 공공조달 저탄소·EU 원산지 최소 기준>

- 철강(건물, 인프라, 민간목적의 자동차에 사용 시) : 전체 철강량 중 25%는 저탄소
-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건물 및 인프라에 사용 시) : 전체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5%는 저탄소 및 EU 원산지
- 알루미늄(건물, 인프라, 민간목적의 자동차에 사용 시) : 전체 알루미늄의 최소 25%는 저탄소 및 EU 원산지

- 해당 기준은 공공조달 뿐 아니라 공공지원 제도 및 관련 정책 프로그램에도 적용되며, 세부 저탄소 기준과 산정 방식은 집행위원회가 마련하는 이행입법(implementing acts)을 통해 구체화 될 예정
- 동 기준은 저탄소 산업제품과 EU 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EU 기업의 시장 형성과 규모 확대를 촉진하여 EU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선도 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
- 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우 EU 원산지 요건 적용에서는 일정 부분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공공조달 및 지원 제도에서 적용되는 저탄소 기준과 산업별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실제 시장 접근성은 해당 기준 충족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
- ▶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절차에서 구매(리스·임대 포함)되는 전기차(▲신규 순수 전기차(PEV) ▲차외 충전형 하이브리드 전기차(OVC-HEV) ▲연료전지 차량(FCEV))는 역내 조립 조건 등 Annex III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규정 발효 후 6개월부터 적용 예정**
  - 민간 판매시장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역내 조립 의무와 같은 조건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 재배치 압력을 높이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기반한 공급망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현재 EU는 배터리 및 핵심 부품의 외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의 EU 내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
- 해당 조항은 특히 투자 위축 가능성을 둘러싼 회원국 간 입장 차이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공급망 경직성으로 인한 비용 확대 우려, 그리고 무역 파트너의 보호주의 비판 가능성 등 다양한 논쟁을 야기 중

### <공공조달·지원 대상 전기차 원산지 요건>(Annex III 참조)

- EU 내 조립: 차량은 EU 내에서 조립되어야 함
- 부품 원산지 기준: 배터리 제외 차량 부품의 EU 원산지 비율이 가격 기준 70% 이상
- 배터리 기준: 구동 배터리(traction battery)에서 셀 포함 최소 3개 핵심 부품이 EU 원산지여야 함
- 추가 원산지요건
  - 배터리는 (셀, 양극활물질, 배터리관리시스템 포함) 핵심 부품 5개가 EU 원산지여야 함
  - 전동 파워트레인 부품의 EU 원산지 비율은 가격대비 50% 이상
  - 주요 전자 시스템 EU 원산지 비율은 가격대비 50% 이상
- 적용시점: 해당 기준은 규정 발효 후 6개월부터 적용 예정이나, 배터리 5개 부품·파워트레인·전자 시스템 요건은 규정 발효 후 3년 뒤 적용
  - ※ Regulation (EU) 2018/858에서 정의된 소형 전기차(M1E 하위범주)의 경우,
- EU 내 조립: 차량은 EU 내에서 조립되어야 함
- (다음 조건 중 하나 만족)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부품의 EU 원산지 비율이 가격대비 70% 이상이거나, 구동 배터리에서 셀 포함 최소 3개 핵심 부품이 EU 원산지
  - ※ 계약당국은 다음 경우 원산지요건에 대해 면제 가능
- 특정 제품·서비스를 한 경제사업자만 공급 가능하고 합리적 대체재가 없는 경우
- 적합한 입찰 또는 참여 요청이 없는 경우
- 요건 적용 시 과도한 비용 발생(비용 차이 25% 초과) 또는 운영·유지관리상 기술적 비호환성 발생

- ▶ 한편, 산업가속화법은 집행위원회에 EU 원산지 요건 및 저탄소 기준을 보완·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U산 제품의 생산 및 사용 확대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
- 집행위원회는 위임입법(delegated acts) 및 이행입법(implementing acts)을 통해 전략 산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EU 원산지 요건 및 저탄소 기준의 세부 내용, 탄소 배출 산정 방식, 인증 및 검증 절차 등을 구체화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세부 기준과 적용 범위가 집행위원회의 입법 조치를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정은 신형 전략 제조산업에 대한 1억 유로 초과 투자에 적용되며, 투자자의 국적이 속한 제3국이 해당 산업의 글로벌 제조역량의 4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 (제4장 참조)**

- ▶ 적용 대상 산업은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위한 배터리 기술 및 가치사슬 ▲전기차 관련 산업 (순수전기차, 차외 충전형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 전기차) ▲태양광 기술 ▲핵심원자재의 채굴·가공·재활용 등임
- 이러한 투자에 대해 투자당국(Investment Authority) 또는 EU 집행위원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투자 시행 불가능
- 다만 ▲EU와 경제동반자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는 투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승인 대상 외국인 투자는 EU 참여 확대, 기술 이전, 연구개발 투자, 고용 유지 등과 관련된 6개 조건 중 최소 4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아래 표 참조)

**<외국인직접투자 승인 조건>**

- 규정 발효 후 12개월부터, 외국인직접투자는 아래 6개 조건 중 4개 이상을 충족해야 승인 가능하며, 이중 EU 노동자 50% 고용 조건은 필수 요건으로 규정
- 외국인 투자자는 EU 기업 또는 자산에 대해 지분 49% 이하로 지분 제한
- 투자는 EU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EU 파트너의 경영 참여, 기술이전, 산업역량 강화 등이 보장되어야 함
- 외국인 투자자는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제공 및 기술 노하우 이전 필요
- 외국인 투자자는 EU 내에서 연매출의 최소 1%를 R&D 투자
- 투자 관련 인력 중 최소 50%를 EU 노동자로 고용 (해당 조건은 반드시 준수 必)
- 외국인 투자자는 EU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공개하고, EU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 투입재 중 최소 30%를 EU에서 조달 노력

- ▶ 법안에서는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제조 역량의 40% 이상을 특정 국가가 보유한 산업에 투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태양광, 배터리 셀 및 소재,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는 측면 존재

- ▶ 투자심사는 통지 접수 후 약 60일 이내 회원국의 투자심사당국(Investment Authority)을 통해 승인 또는 거절 여부가 결정되며, 투자 승인은 해당 투자가 EU 산업에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판단
  - EU에서 외국 기업이 EU 기업 30% 이상 또는 EU 역내 자산의 30% 이상을 확보하려는 경우, 해당 투자 계획을 사전에 해당 회원국의 투자심사 당국에 통지해야 하며, 당국은 이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 \* 규정 발효 1개월 이내 각 회원국은 투자심사 당국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 투자 심사와 승인 여부를 담당
  - 4단계 절차를 거쳐 심사 : 투자 사전 통지 → 회원국 투자심사기관 심사 → EU 집행위원회의 의견 제시 또는 개입 → 투자 승인 이후 지속적 모니터
- ▶ 동 법은 외국인투자 심사과정에서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집행위원회는 투자심사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임입법을 통해 신흥 전략산업 목록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규제 대상 산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 (허가 신속화 및 산업가속화 지역 도입) (제5장, 제6장 참조)

- ▶ 산업 제조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산업 활동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규정
  - 기업이 산업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허가를 보다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
  - 아울러 산업 프로젝트 관련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 단일 디지털 게이트웨이 (Single Digital Gateway, Regulation (EU) 2018/1724)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과 효율성 강화
  - 규제 간소화와 투자 촉진을 강조해 온 집행위원회의 산업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
- ▶ 모든 회원국은 에너지집약 산업·자동차 산업·탄소중립 기술 분야의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규정 발효 후 12개월 이내 ‘산업제조 가속화 지역(Industrial Manufacturing Acceleration Area)’을 최소 1곳 이상 지정해야 하며, 이는 산업단지·클러스터 형태의 제조 집적 지역을 의미
  - 해당 지역은 전략산업 프로젝트를 집적하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회원국은 허가 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에너지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및 인력 지원 등 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

### 3. 평가 및 전망

#### ■ 회원국들은 물론 집행위원회 내에서도 산업가속화법에 대해 정치적 대립 및 반발이 상당함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변동이 많을 것으로 전망

- ▶ 산업가속화법의 역내 생산 요건 및 ‘유럽 우대(European preference)’ 규정 도입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정책 방향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상당

- 산업가속화법은 2025년 12월 초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체코를 중심으로 9개 회원국(에스토니아·핀란드·아일랜드·라트비아·몰타·포르투갈·슬로바키아·스웨덴 등)이 역내 생산 중심의 규정이 경쟁·가격·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발표 일정이 2026년 1월 말로 연기
  - \* 이들 회원국은 공동 서한을 통해 ‘유럽 우대’ 성격의 규정을 도입할 경우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EU가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무역 파트너라는 인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역내 제조 기반 강화를 위해 강력한 EU 원산지 및 역내 생산 요건 도입을 지지하는 반면, 독일 등 국가는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 공급망 비용 증가, 글로벌 가치사슬 교란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 중
- ▶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산업가속화법 기존안에 대해 통상총국(DG TRADE), 국제파트너십총국(DG INTPA), 경쟁총국(DG COMP) 등 9개 핵심 정책 부서가 보호주의적 성격과 통상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기
  - 기존에 유출된 초안에서는 EU 원산지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trusted partners)’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산업가속화법을 주도한 성장총국(DG GROW)과 통상총국(DG TRADE) 간 입장 차이
  - 최종 제안에서는 통상총국(DG TRADE)의 의견을 반영해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 까지 EU 원산지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정
    - \* 경쟁총국(DG COMP)은 보조금·조달에서 유럽산 요건 강화에 따른 내부시장 경쟁제한·국가보조금 왜곡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파트너십총국(DG INTPA)은 개발협력 및 글로벌 파트너십과의 정합성 문제를 제기
- ▶ 산업가속화법은 집행위원회 제안 단계에서 막판 협상을 통해 일부 조항이 수정된 상태로 발표되었으며, 회원국·의회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유럽산 콘텐츠 요건·신뢰 파트너 범위 등 핵심적인 부분의 추가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
  - \* EU 입법은 집행위 초안 발표 후 유럽의회(705명 의원) 심의 → EU 이사회(27개 회원국 대표) 심의 → 삼자협상(Trilogue)을 거쳐 확정

### ■ 산업가속화법은 넷제로기술 및 전략산업에서 EU의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우리 기업에는 역내 생산 확대 압력 등 부담 요인이 존재하는 한편 중국 견제에 따른 상대적 협력 확대 가능성도 병존

- ▶ 법안에서는 EU의 경제안보 강화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산업정책 조치 필요성을 정당화
  - 기존의 자유무역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안보, 기후정책, 산업정책을 결합한 통합적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
  - EU 역내 투자 및 산업 개발 구조 뿐 아니라 공공조달과 지원 제도를 통해 공급망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조달 전략, 공급업체 선정, 비용 구조 등에도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

- ▶ 산업가속화법은 FTA 체결국 등 동맹국에 대한 예외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원산지·저탄소 기준, 투자 조건을 통해 EU 내 부가가치 창출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EU 현지 생산 및 공급망 참여 확대 압력으로 작용 전망
  - 자동차 업계의 경우, EU 내 조립 조건이 완성차 및 부품 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
  - 철강, 알루미늄 업계의 경우, 공공조달에서 저탄소 철강·알루미늄 비율 25% 의무 사용 조건으로 준수 부담 및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
- ▶ 우리 기업들은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성 악화에 따른 반사이익과 동시에 현지 생산·투자 확대 압력, EU 기업과의 경쟁 심화라는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EU의 전략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파트너로 포지셔닝해야 하는 상황
  - EU 기업 우선 기조가 강화하고 있는 만큼 EU 역내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고, 단기간 대체가 어려운 부문일수록 향후 EU의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로 참여 가능
  - 배터리 산업의 경우 EU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 및 소재·장비 업체에는 공급망 현지화 압력과 협력 확대 기회가 병존

### 참고문헌

- European Commission. (2026).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the acceleration of industrial capacity and decarbonisation in strategic sectors (Industrial Accelerator Act) (COM(2026) 100 final)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6.03.05.). EU 산업가속화법(IAA) 초안 발표 주요 내용
- Fearn, J.-A., et al. (2026,02.25). The EU Industrial Accelerator Act: What businesses need to know. Paul Hastings LLP
- Ferguson, R., et al. (2026,03.04). EU Commission proposes “Buy European, Invest European” rules. Paul Weiss.
- Financial Times. (2025.12.03.). Brussels pushes for 70% of critical goods content to be ‘made in Europe’.
- Financial Times. (2026.02.05.). The controversial plan to set ‘Buy European’ rules.
- Financial Times. (2026.03.04.). EU to include UK and Japan in ‘Made in Europe’ plans.
- Global Times. (2026.03.05.). EC unveils ‘Made in EU’ industrial plan amid protectionism fears; move could distort competition, harm ties with China.
- Politico. (2026.02.06.). Macron sells a vision of ‘Made in Europe’ that Merz and Meloni aren’t buying.
- Politico. (2026.02.17.). Von der Leyen’s industry master plan runs into trouble.
- Politico. (2026.03.03.). Brussels says its ‘Made in Europe’ act is ready for prime time. Here’s why it isn’t.
- Politico. (2026.03.03.). Brussels to finally adopt ‘Made in Europe’ act after yet another rehash.
- Politico. (2026.03.04.). EU car rescue plan sparks industry civil war.
- Politico. (2026.03.04.). Why the EU’s new industry act is climate policy in disguise.

### 저자 소개

임산호 | shl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경제, 국제금융, 산업 공급망, 에너지이다. 주요 논문으로 “Optimal bond holding dynamics with hedging against real exchange rate risk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2023),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한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미친 영향 분석” 『무역학회지』 제49권 제5호 (2024), “The Effects of Risk-hedging Motives and Trade Costs on Foreign Bond Holding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025)가 있다

##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6.2.18.~2026.3.4.)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 美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 美 행정부 다양한 대체 수단 마련 중(2.20)

- ▶ (주요 내용) 美 행정부, IEEPA\* 기반 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부과 발표(2.20.)

\*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비상시 美 대통령에게 경제 거래를 규제할 다양한 권한 부여

- 전 세계 대상 150일간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발표(2.20.) / 트럼프 대통령, 하루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상향한다고 발표(2.21.)
- 아울러, 美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2.22.)
- ▶ (평가) 주요 언론은 美 행정부가 IEEPA가 아닌 다른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권한 행사에는 기존에 비해 더 엄격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분석
- 한편, 既定수 관세 환급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

출처: New York Times(2.20.), Reuters(2.20.), Reuters(2.22.), 연합뉴스(2.23.) 등

### ■ 중국 상무부, 일본 기업 20개社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2.24)

- ▶ (주요 내용) 中 상무부, 20개 일본 기업·기관 수출통제 명단에 지정(2.24, 즉시 발효)
  - 미쓰비시 계열 조선, 항공, 엔진, 해양기계 관련 5개사 및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관련 6개사,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중공업, 방산 분야 20개社 대상
  - 중국 수출업체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전면 금지 / 해외 기관 및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의 제공 금지
  - 이외, 미쓰비시 머티리얼즈, 자동차 제조업체 스바루 등 20개 일본법인을 ‘관심 명단’에 지정 / 상기 법인에 수출시 위험평가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이중용도물자 수출에 대한 심사 강화
- ▶ (평가) 방산, 자동차, 중공업 등 일본 핵심 산업을 직접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조치로 평가
  -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이어진 보복 조치의 연장선으로 법적제재를 통해 방산, 조선, 중공업 분야 일본기업의 핵심 공급망을 공식적으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대일본 공세 수위를 상향했다는 평가

출처: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2.24.), NHK(2.25), 매일경제(2.25.)

##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글로벌 경제 전방위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 ▶ (주요 내용)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해당 지역의 물류가 마비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 이란 혁명수비대의 동 해협 봉쇄 선언 및 글로벌 해상 보험사들의 이란 영해 페르시아만 일대의 위험 보험 인수 중단 등으로 해당 영역의 물류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
  -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비축유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단기 대응 가능
- ▶ (평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동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식량 위기 등으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 우려
  - 해협 봉쇄에 더하여 사우디, 카타르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이 겹치면서 ▲국제 유가 배럴당 100~120달러 돌파 ▲글로벌 GDP 0.4%p 하락 ▲인플레이션 1.2%p 상승 등 스태그플레이션 촉발 가능성 전망
  - 질소비료의 전세계 교역량 2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만 각국의 전략적 비축량이 미흡하여 수급난이 수개월 지속될 경우 전세계적 곡물 수확량 감소 및 식량 가격 폭등 가능성도 존재
  -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금융개발공사(DFC)의 위험 보험 제공 등을 지시하고 필요시 미 해군의 유조선 호송도 시사하였으나 실제 호송 작전에 나설 시기는 불확실

출처: NYT(3.2.), 경향신문(3.3.), The Economist(3.3.), Nikkei Asia(3.4.), Truth Social(3.4.)

## ■ 미·이스라엘-이란 분쟁 격화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제기

- ▶ (주요 내용)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물류 허브 마비, 유가 급등 등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영향 가능성 제기
  - 특히, 전력 소비 비중이 매우 높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에너지 수급 제한에 따른 영향 가능성 제기 / 일각에서는 대만의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96%)에 따라, 전력난 발생 시 스마트폰과 AI 시스템 등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 생산 차질 가능성 제기
- ▶ (평가)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반도체 제조 비용 상승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
  - 메모리 반도체 부족으로 고부가가치 서버·AI용 반도체로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집중되면서 모바일 산업 분야의 메모리 반도체 수급 부족 상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출처: 연합뉴스(3.4.), 조선일보(3.4.), NYT(3.2), Reuters(2.26.) 등

##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2.19.	[WTO] 中 상무부, WTO 개혁에 관한 中 입장문 제출
	2.24.	[수출통제] 中 상무부,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에 근거하여 ▲미쓰비시 조선 등 日 업체 20개사를 ‘통제리스트’에, ▲스바루주식회사 등 20개사를 ‘관심리스트’에 추가
	2.24.	[제재] 英 정부, 대러제재 범위를 확대하여 제재 명단에 중국 및 UAE 법인을 포함한 250명의 개인 및 기업 추가
	2.25.	[서비스] 中 상무부 등 7개 부처, 「수입 장려 서비스 목록」 개정안 발표 : ▲집적회로 및 저탄소 관련 연구개발·설계 서비스 ▲녹색·저탄소 건축 공정 관련 서비스 ▲공급망 관리 서비스 ▲의료 및 건강 서비스 추가 등
	2.27.	[관세] 中 정부, 캐나다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非부과 : 카놀라박·완두콩 100% 추가 관세 및 바닷가재·게 25% 추가 관세 非부과
	2.28.	[반덤핑] 中 정부, 캐나다산 유채씨 대상 5.9% 반덤핑 관세 확정
	3.2.	[이란사태] 상하이 협력기구, 이란 사태 관련 성명 발표 : ▲이란의 국가 주권, 안보 및 영토보전 보장 ▲대화, 상호존중에 따른 해결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각 중단 등 촉구
미국	2.18.	[공급망] 美 백악관, 원소 인 및 제조제 공급 확보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2.19.	[무역협정] 美-인도네시아 상호 무역 협정 체결
	2.19.	[무역협정] Trump 대통령, USMCA 폐기하고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각각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식 검토 중(NYT)
	2.19.	[무역] 美 상무부, 2025년 무역수지 발표 : 상품 무역 적자 역대 최대치 기록(NYT)
	2.19.	[광물] Rick Switzer USTR 부대표, 2026년은 광물의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Inside U.S. Trade)
	2.19.	[관세] 美 제조업협회(NAM), ‘핵심 제조투입재 관세 부담 완화’ 요구
	2.20.	[관세] 美 상무부, 한국산 절단강판 상계관세 명령 관련 2023년 행정재심 최종 결과 공개
	2.21.	[관세] Trump 대통령, 122조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발표
	2.22.	[관세] Bessent 재무장관 및 Greer USTR,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지속 의지 표명(CNN, ABC)
	2.22.	[무역합의] EU 집행위, 미측에 미-EU 무역합의 조건 준수 요구(Reuters)
	2.22.	[무역합의] 인도,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대표단 워싱턴 파견 연기(Reuters)
	2.22.	[관세] 美 관세국경보호청(CBP), 2.24. 12:00am(美 동부 표준시간)부터 IEEPA 관세 징수 종료 발표
	2.23.	[관세] 美 관세국경보호청(CBP), 제122조 10% 관세 징수 공지 발표 : 백악관 관계자, 15% 관세율은 아직 작업중이라고 언급(Inside U.S. Trade)
	2.23.	[관세] Trump 대통령, 여타국에 기존 무역합의 준수 필요성 강조(Truth Social)
2.23.	[관세] 美 의회, Trump 대통령 관세 정책에 부정적 분위기라 보도(Politico)	

국가	일자	내용
미국	2.23.	[관세] 美 민주당, Trump 행정부에 관세 환급 촉구 : 민주당 상원의원 19인, 180일 내 IEEPA 관세 전액 환급 요구 법안 발의
	2.23.	[무역] Trump 행정부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美 무역수지 未개선 이유로 한국, 독일, 일본, 대만 등 주요 수출국들의 정부 보조금 지적(WSJ)
	2.23.	[관세] 美 연방대법원의 IEEPA 기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Trump 행정부 추가 6개 분야* 232조 추가 검토 중(WSJ) *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속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및 통신장비 등
	2.24.	[무역합의] Sefcovic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미측으로부터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으며 EU 회원국들에게 무역합의 승인을 촉구
	2.24.	[관세] 美 수입업체, 301조 확대* 관련 대법원 상고 *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무역법 307조의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對中 301조 관세 대상을 대폭 확대 (500억 달러→3700억 달러)한 조치
	2.25.	[핵심광물] 美 USTR, 핵심광물협정(ATCM) 의견제출 요청
	2.25.	[관세] 美 USTR Greer 대표, IEEPA 판결 후속조치 언급(Bloomberg·FOX 등) : 일부 국가 대상 122조 관세 10%→15% 인상 언급
	2.26.	[관세] 美 Trump 행정부, 기징수된 IEEPA 관세 수입 유지 전략 검토 중(Politico) : ▲환급 청구 절차 지연 ▲일부 금액 포기를 조건으로 우선 환급 허용 ▲새로운 법적 권한에 근거, 기징수된 관세 적법성을 주장하는 방안 등 검토 중
	2.26.	[관세] 美 민주당 상원의원, 「Tariff Refund Act of 2026」 공개 : IEEPA 관세의 180일 내 환급 의무화 제안
	2.27.	[관세] 美 민주당 상원의원, Bessent 재무장관 앞 서한 통해 관세 환급절차 즉시 개시 요구
	2.27.	[관세] 美 자동차부품 수입업체, IEEPA 관세 대법원 판결 후 De Minimis(소액면세) 복원 요구 (Inside U.S. Trade)
	2.27.	[미중관계]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중국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 영향 조사 착수(Inside U.S. Trade)
	3.2.	[정책] 美 USTR, 트럼프 대통령의 2026 통상정책 의제(Trade Policy Agenda) 및 2025년 연례보고서 발표
	3.2.	[관세] 美 연방항소법원, Trump 행정부의 관세 환급소송 절차 지연 요청 기각 : 사건을 즉시 국제무역법원(CIT)으로 환송하는 명령서(mandate) 발부
	3.3.	[AI] 美 대법원, 인공지능은 법적인 저작자가 될 수 없고,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저작권 인정 불가 판결 확정
	3.3.	[관세] 美 Trump 행정부, 5개월 내 301조 조사 완료 후 신규 관세 부과 방침 시사
3.3.	[반도체] 美 Trump 행정부, Nvidia 반도체 對중국 수출 물량 추가 제한 검토(Bloomberg)	
일본	2.19.	[대미투자] 소프트뱅크 그룹 등 약 20개사, 대미투자 일미 연합(닛케이) : 대미투자자 제1호 프로젝트 핵심 가스 화력발전으로 사업규모 총 333억 달러
	2.19.	[대미투자] 대미투자자 제1탄 3개 프로젝트 지역, 미국 내 선거 접전지 집중(닛케이)
	2.19.	[대미투자] 제2호 대미투자 선정 작업 시작 : 차세대형 원자로 건설 등 검토(NHK)
	2.19.	[데이터센터] 日 도쿄도, 데이터센터 건설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방침(닛케이)

국가	일자	내용
일본	2.19.	[반도체] 2026년 1월 기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닛케이)
	2.19.	[반도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글로벌파운드리스(GFS) 와 차세대 자동차용 반도체 공동 생산 발표(닛케이)
	2.24.	[수출통제] 日 기업·기관 20곳, 中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
	2.25.	[수출통제] 中 수출금지 대상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IHI 등, 정보 수집에 분주(닛케이·NHK)
	2.25.	[희토류] 日 환경성, 폐기물중 희토류 회수 비용 보조 계획(닛케이)
	2.25.	[반도체] 도쿄일렉트론(TEL), 한국서 160개사와 공급망 구축(닛케이)
	2.26.	[반도체] 日 정부, AI용 최첨단 반도체 설계·장비·소재 기업 육성을 위해 국내 3개 거점 조성 방침(닛케이) : 도쿄에 설계 거점, 홋카이도에 장비·소재 거점 설치 계획
	2.27.	[반도체] 라피더스, 정부 의결권 10%대로 제한(닛케이)
	2.27.	[희토류] 日, 나미비아와 희토류 공동탐사 추진 중(닛케이)
	2.27.	[반도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UP) 총리, 일본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의지(닛케이) : 반도체 제조 및 후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 적극 유치 중
EU	2.23.	[철강] EU 집행위, 철강쿼터법안에 대한 삼자협상 개시
	2.24.	[지속가능성] EU 이사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개정안 최종 승인 : (주요 개정 내용) ▲적용 대상 축소 ▲공시부담 완화 ▲가치사슬 내 기업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 관련 정보접근성 제고 등
	2.27.	[협정] EU 집행위원회,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잠정 추진 발표
	3.4.	[산업] EU 집행위,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 초안 발표
캐나다	2.19.	[자동차] GM, 오샤와 공장에 6,300만 캐불 설비 투자 : 차세대 대형 픽업트럭 생산 준비 예정 (The Globe and Mail)
	2.19.	[핵심광물] 영국-호주 광산기업 리오 틴토, 몬트리올 네바스카 리튬 인수로 캐나다 핵심광물 사업 강화(The Globe and Mail)
독일	2.19.	[자동차] 대형 사모펀드 3곳(Blackstone, EQT, CVC), 폭스바겐 그룹 자회사 에버렌스에 대한 인수 제안 제출(Handelsblatt)
	2.23.	[자동차] 라이히에 獨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 및 즐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 자동차 및 모빌리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향서 서명
스웨덴	2.25.	[AI] 스웨덴 재무부, AI 전략 및 실행계획 발표
	2.27.	[배터리] 美 배터리 스타트업 Lyten사, Northvolt 자산 인수 발표
아르헨티나	2.19.	[투자] 아르헨티나 정부, 대규모 투자촉진제도(RIGI) 신청 기한 1년 연장 및 적용 분야 일부 확대
칠레	2.25.	[항만] 칠레 신안토니오 항만공사(EPISA), 신안토니오 외항 건설 프로젝트 입찰 일정 연장 변경 발표
인도	2.22.	[무역협상] 美 연방대법원의 IEEPA 상호관세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 인-미 무역협상 연기 (Moneycontrol)

국가	일자	내용
인도네시아	2.18.	[산사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소재 모로알리 산업단지에서 산사태 발생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인 PT QMB가 운영하는 광미(tailings) 처리 구역에서 연약한 지반 조건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콩고민주 공화국	2.19.	[광물] 콩고 정부, 소규모 금광 부문 거버넌스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본협정 체결

##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네덜란드	3.2.	[가스] 네덜란드 TTF 가스 4월물 전일 대비 50% 이상 급등 : 종가 기준 39.2% 상승
독일	2.26.	[핵융합] 독일 바이에른주, 핵융합 발전소 건설 추진 : 최대 4억 유로 투자 계획
세르비아	2.26.	[원자력] 세르비아 에너지광업부, '원자력 프로그램 이행기구' 공식 출범
베트남	2.19.	[LNG] 베트남 권랍(Quynh Lap) 지역에 LNG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 선정 : SK 이노베이션, PV Power, NASU로 구성된 3개사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확정
인도	3.2.	[에너지] 이란 전쟁 격화로 인도의 3대 연료 수입에 충격 우려(Business Standard) :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해상 운송 차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원유·LNG·LPG 등 3대 연료 수입 전반에 대한 리스크 확대 양상

# 「경제안보 Review」 2026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6-1호 (2026.1.9)	분석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분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이재원
	분석	'EU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통신문' 주요 내용 및 분석	임산호
	현안	미국 국방수권법과 경제안보: 투자, 바이오, 조선, 공급망	최용호
26-2호 (2026.1.23)	분석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개입과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화	유아름
	현안	한중 정상회담(1.5.)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안수린
		한일 정상회담(1.13.)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현안	중국의 對일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치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26-3호 (2026.2.6)	분석	미국발 AI 경쟁의 새로운 국면: 수출통제와 관세의 결합	이재원
	현안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와 글로벌 협력 구도 재편	황지현
	현안	중국 반도체 굴기 평가 및 업계 현황	안수린
26-4호 (2026.2.27)	분석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 관련 쟁점 분석: 상호관세 위법, 대체 수단, 관세 환급, 무역 질서 영향	최용호
	현안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AI Impact Summi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수연
	현안	미국-EU 관계 냉각 속 유럽의 역지력 강화 동향	임산호
26-5호 (2026.3.13)	분석	미국 주도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동향	황지현
	현안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글로벌 에너지·경제안보 리스크	유아름
	현안	Made in Europe 규정 (EU 산업가속화법) 발표 및 영향	임산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mailto: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